

시공 하자·안전관리 소홀...5명 사망 곡성 산사태 “人災 맞다”

곡성경찰, 공무원·시공사·감리회사 관계자 등 9명 검찰 송치
집중호우 예보에도 경사면 방수포 미설치 등 예방 조치 부실
도로관리사업소 “방수포 필요없는 곳...용역결과 보고 판단”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은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산사태 (광주일보 8월 10일 3면 보도·사진)는 안전 조치를 소홀하게 한 데 따른 ‘인재(人災)’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집중호우가 예보됐고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된 상황이지만 도로 공사 과정에서 매몰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산사태 예방 조치를 부실하게 해 사태를 키웠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도로 공사 시공·관리를 맡은 관련 기관의 안일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곡성경찰청은 22일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현장의 시공·감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공사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로 넘긴 9명은 시공사와 감리회사 등 법인 2곳과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회사측 3명,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1명 등이다. 이들은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도로 확장을 위해 깎아낸 경사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포를 씌우거나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등으

전남도 도로 공사 때 방치한 토사 폭우에 흘러내려 피해 키워

5명 목숨 잃은 곡성 산사태 산사태 ‘인재’ 단계 발발 원인은 도로 공사 때 방치된 토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손에 꼽을 정도로 방수포를 설치한 곳만 1곳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방수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산사태 예방을 위해 깎아낸 경사면에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등으



곡성 산사태 현장. 산사태 발생 후, 산사태 예방을 위해 깎아낸 경사면에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등으

토 용벽으로 기존 설계·시공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반 침하 등을 대비한 충분한 사전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전관리·감독 등에 대한 감리 역할도 부실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비가 올 때 공사 현장 바닥과 경사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포 등을 덮도록 지시하는 등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사를 발주한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경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대한 지반학회에 진행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단정하긴 이르지만 해당 공사 현장에는 방수포를 덮는 조치가 필요 없는 지역이라는 게 도로관리사업소 주장이다. 경찰 수사결과와 별도로 곡성 산사태 발생 지역은 기존 산사태 취약지역에 포함되

지 않았던 곳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림청이 제작한 전국 산사태 위험지도의 경우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은 1·2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고 있지만 곡성 산사태 발생 지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림청의 2020년 산사태 피해지역 중 ‘산사태 취약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고 곡성 산사태 구간도 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산(산림청), 건물(지방자치단체), 도로(국도교통부) 등으로 관리 주체가 다른 산사태 위험 정보 분석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안전거리 미확보 잘못?... 고의 급정거 보복운전 탓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정거해 뒤따르던 차량들의 추돌 사고를 야기한 50대 운전자가 보복 운전이 아니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운전자들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50)씨는 지난해 8월, 광양C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모르고 대기하다 경적을 울리는 뒤 차량 운전자에게 화가 나 출발했다가 몇 미터 가지 않고 교차로 중간에서 급정거했다. 뒤따르던 화물차는 가까스로 멈췄지만 화물차를 따르던 승용차는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6초 가량 멈췄다가 사고 발생 뒤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 뒤 경적을 여러 차례 울렸지만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화물차 운전자가 가족들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화물차를 들이받은 승용

경적 울렸다면 급정거 추돌사고 야기한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선고 차 수리비도 2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 수사기관은 A씨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 미숙,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에서 비롯된 사고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를 위협할 의도로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징역 8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급정거 행위로 뒤따르던 차량들이 제 때 멈추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사고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앞선 차량과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A씨가 별다른 이유없이 급정거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데다, A씨가 차량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있어 뒤따르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것 뿐인데 보복으로 급정거해 사고를 야기했다”면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부지 공동주택 건립 안돼”

시민단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앞두고 광주시 압박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들어설 공동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부지 내 공동주택 단지 허가 여부를 논의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광주지역 26개 시민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무등산 신양개울 신축 반대 시민연대’는 23일 오전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동구청은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 부지에 공동주택 단지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찬성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80여 세대가 들어서는 공동주택 단지 ‘신양개울’을 짓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국립공원인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 준보전산지에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시관리 상식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시 경관에 대한 광주시의 무심한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미 신양파크 호텔 부지 건립에 주가던 조성은 진행중이며 지

산위원회에 2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만드는 구상이 광주시에 제출되는가 하면, 신양파크호텔 인근에 또 다른 신규 주택단지 사업이 모색되고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한편 1980~1990년대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호텔이었던 신양파크호텔은 2002년 7월 문을 닫았다. 이후 2004년 12월 재개장 했지만 노후화 등으로 수익이 감소하며 지난해 12월 폐업했다. 호텔을 소유한 ㈜대양인투스는 지난해 9월 2만5000㎡ 터에 지하 3층~지상 4층 6개동 80가구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건설계획안을 제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된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

기아차 취업사기 전면 재수사 촉구

피해자들 검찰 앞 집회



김씨의 계절...“사라의 김치 담궜요” 22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2동 마을 사랑채에서 동구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김치를 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기아차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목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처벌 수위가 낮은 혐의를 적용하는가 하면, 공모 가능성이 높은 다른 목사들에 대한 수사도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23일 광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아차 취업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자신의 사무실에 구직자들에게 받아놓은 입사 지원 서류 수백장을 발견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구체적 피해 경위 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라 검찰에 관련 증거 자료로 제출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기아차 취업사기는 목사 등 사건 핵심 관련자들 5명이 치밀하게 준비한, 피해자만 수백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취업사기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광주지법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아차 취업 사기 수사 과정의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